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4630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박용준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정능호, 김태민, 김명현, 양유환, 함미정, 이원배, 박순호, 김동성, 최병순, 정홍근, 정인화, 김세원, 최미자, 송용석, 신진미, 최혜연(17인)

1. 주 문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대전의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국방산업 기반과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에 우선 배치하고, 대전을 선도적인 이전 지역으로 반영하라.

2. 제안이유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 혁신도시 중심 집적,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대전은 KAIST,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수한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만큼, 관련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대전 혁신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을 촉구함.

3. 수신처: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대전광역시장

4. 건의안: 별첨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라는 5대 원칙 아래 내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관 이동 계획이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대전에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이다. KAIST를 비롯한 대학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 관련 연구·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정부가 제시한 **‘지역 대학·산업 연계’**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전만의 강점이다.

따라서 막연히 많은 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전에 집적할 때 유사 기능 간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대전은 이미 안정적인 정주기반을 갖춘 도시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방향 아래,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혁신도시의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광역생활권 기반과 연구개발 생태계를 갖춘 대전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전은 실행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고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이며, 민간 오피스 인프라도 풍부하다. 정부가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은 **'속도감 있는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의 강점이 이 계획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세운 5대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국가 균형성장의 완성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및 국방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광역시에 선도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 방침에 따라, 교통과 업무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전의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선도 지역으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당초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라.

2026. 9. 2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